

“광주에선 고졸이 부러워”

광주시-교과부, 14개 기관·기업 취업 협약

공무원 신규채용시 고졸자 20% 할당

기업들 220명 채용...맞춤형 취업 지원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공무원 신규 채용시 특성화 고교 졸업자를 20% 이상 뽑고, 광주지역 일부 기업들도 고졸채용을 대폭 늘리기로 해 고교 졸업생의 취업 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3일 오전 시청에서 교육 과학기술부와 시 교육청, 상공회의소 등 14개 주요 기관·단체들과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교 졸업생 취업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지방공무원 기능 인재 추천제 도입과 함께 공업·농업·시설·통신 등 기술직별 20% 이상과 기능 직렬

3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해 오는 5월 공무원 신규 채용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9급 기술직 공무원 신규채용(40명)의 23%인 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청년인력제 30% 이상 특성화고 졸업자 배정 등 각종 취업 지원사업에 특성화고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도 기술직 공무원 신규채용의 20% 이상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

정)자를 우선 채용키로 했다.

기업에서는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가 150명, (주)피파이 50명, 광주은행 15~20명 등 220여 명의 고졸자를 올해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광주 일자리 종합센터, 광주 고용센터, 광주 경총, 광주상공회의소 등 취업지원기관은 구인정보 공유와 공동 취업박람회, 순회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와 기업 간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 기관·기업은 고졸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기업 견학회 확대 ▲중소기업 및 맞춤형 취업약정 ▲해외인턴십 광주시 지원 확대 ▲우수기업 버스 투어 ▲취업컨설팅 ▲청년 일자리 로드쇼 ▲취업박람회 ▲취업동아리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일자리는 경제활동의 시작이자 결과물이고 복지의 핵심”이라며 “고졸 채용 확대를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에 걸 맞는 학력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광주 전산고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아차 고교 실습생 사고를 계기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인재발굴의 장이 아닌 임금과 노동력 창작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광주시 북구 교보생명 호남본부에서 열린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소통해야 한다”며 “매주 수요일을 ‘밥상머리 교육의 날’로 정해 정부, 공기업, 일반 기업으로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9.5도까지 올라간 23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외투를 벗어던지고 포근한 햇볕 아래서 줄넘기를 하며 뛰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시·전남 5개 시군 주요 개발사업 올스톱 위기

영산강 수계 오염물질 초과 배출

환경부 인·허가 전면 금지 통지

광주시와 전남지역 5개 시·군이 영산강 수계(水系)에 허용된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다음달부터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전면 금지되는 등 제제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광주시와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영산강 주변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3대 강 수계 전국 20개 자치체에 ‘관련법에 따라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전면 금지할 것’을 구두 통지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공식 공문을 통해 개발사업인 인·허가 금지를 공식 통

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2002년 제정된 ‘3대 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행정 재난 조항을 첫 적용한 것으로, 정부가 환경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치체의 신규 개발사업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가 정부 각 부처에 해당 자치체 명단을 통보하는 순간부터 발동되며, 각 자치체가 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때까지 계속된다.

금지 대상 개발사업은 공장·아파트·백화점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각종 도시개발·산업단지 개발·관광단

지 개발 등으로, 사업 착수 전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사전영향평가 등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광주시의 경우 평동산업단지 3차 개발과 광주천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5건의 개발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개 자치체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애초 배출허용량보다 매일 평균 1만4034kg 초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 수질오염 흥왕관리제 시행 전에는 수질오염물질을 BOD 기준으로 1일 평균 8972.5kg 이하로 배출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1만154.4kg으로 24%(2181.9kg)나 초과 배출해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함평군과 광주시도 하루 1625kg과 1586kg가량을

초과 배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개발행위 전면금지에 따른 과정을 우려해 일부 자치체는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총량 관리는 2010년 종료됐지만, 2011년 하수처리장 신설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줄였을 경우 이를 오염물질 삽감량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개선 등 2단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총인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오염배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역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염물질저감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총인비리 공무원 3명 직위해제

광주시 “총인시설 공사 중단은 어렵다”

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광주시 공무원 3명이 직위해제됐다. 광주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단기)제도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진행중인 총인처리시설 공사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인 처리 시설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공무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총인 처리시설과 관련해 뇌물악수 등 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시청 반모 서기관과 불구속 수사중인 된 모 서기관을 직위 해제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모 광산구 국장에 대해서는 광산구에 직위 해제하도록 통보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던키제도가 설계 평가 20일 전에 심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어 업체와 심의 위원 간 사전 접촉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행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중앙 부처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 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를 맡아 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하는 등 형사 처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총인 처리시설 공사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지켜봐야 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환경부와 약속했으며, 위반시 연간 138억원 부과금을 내야한다는 점 등을 들어 어렵다는 입장은 밝혔다. 광주시는 다만, 공사 준공 후에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시공업체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여울기자 wool@

광신대학교

학부정시 추가모집

2월 24일(금)~27일(월)

입학 학부 062-605-1114
동의 대학원 062-605-1115

재벌개혁에도 아랑곳 않는 통큰 사조- 통큰 사조의 끝없는 탐욕 47년 역사의 전남기업 화인코리아 죽여서 빼앗기는 계속되고 있다.

사조는 약속대로 즉시 회생개시 및 인가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 사조의 통큰 뱃장은 이곳에서? 막강한 권력과 언론장악력 과시

(사조기획실장의 말들): 2011. 3. 5 사조 골프장 식당에서)
a. MB제다. 이상득의원님은 주진우회장님 어머니 말씀이라면 다 들여주신다.
b. 대통령 영부인께서는 1회에 2번씩 사조 골프장에 개인적으로 오신다.
c. 종편 4대 방송은 주회장님이 만들어 주셨다.

d. 흥보팀과 외주홍보회사를 통해 5대 중앙지는 물론 소비자단체 보도가 불리한 기사는 다 막는다.

e. 원래 회생에 협력했던 K은행은 행장 연임 다음달 1일만에 물에 사조에 채권 양도 (보통 3~4주 걸림). 그 은행의 인터뷰 기사에는 매각대상 회사가 삼호그룹이라고 하여 실무자는 매각대상 회사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을 드러낸다.

f. 2011.3.5 사조기획 실장의 말: 최근 법원 인사로 인해 이제는 전 재판부가 되었음

a. 43억3천만원의 담보채권을 매입하면 담보채권 75%이상이 되므로 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수조사가 78억에 매입해주기로 하였다고 법원에 보고하자 (2011.5.4) 2월후 “그 회사가 그럴 능력이 있느냐. 웬만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여 그 회사의 당시 예금통장 약 112억3천만원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당일 회생신청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2011.5.6.)

b. 사조의 이런 횡포를 알릴 방법이 없어 광고 내용은 “영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 재판부에서 1회에 5천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도 모자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록 등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증빙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c. 이 재판부 주심판사의 형성이 형제인 K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신규 임용한 지방법원판사 26명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죽여서 빼앗기

a. 원재판권자는 아닌 사조는 도와주겠다고 안심시킨후 물레 매입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변제공탁수법으로 빼다시피 담보채권을 사들여 담보채권 7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인가를 받는 회생법을 압용하여 회생개시가 되더라도 우리가 반대하면 어차피 인가를 못 받으니 개시를 해주지 말라고 법원에 계속 재판권자의 의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4. 개시만 되면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사조는 부채상환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a. 현 담보채권 총액 약 256억
사조 담보채권 총액 약 170억
원 재판권자는 회생에 협력한 채권 약 153억 포함

b. 담사의 현금과 현금화 자산 약 220억
협조사들의 협조금액 약 200억

c. 회생개시만 되면 더 상환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조는 부채상환을 방해하고 상환한 부채도 찾이기면서, 법원에는 회인의 파산절차가 늦어져 사조가 지금으로부터 오히려 파산신청을 할 시기로 되어 회인의 채권자의견서를 보내 회생개시를 약속같이 방해하고 회사를 죽여 헐값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5. 2012. 1. 19. 사조의 경매금지 및 채권자의 채무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렸습니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의의적인 목적으로 담보채권을 사들여 상환을 거부하고 회생을 방해 했을 때 회생신청을 한 회사가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다면 우선 회생 개시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 회생법은 담보채권자의 7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원래의 채권자가 아닌 사조는 위의 방법으로 담보채권(약 66%)을 확보하여 어차피 인가를 못 받았으니 회생개시를 하거나 말라는 채권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벌기업이든 옥심나는 회생이 회생신청을 했을 때, 담보채권 25%이상만 확보하여 회생을 반대한 후 경매절차를 통하여 헐값에 그 회사를 인수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담보채권자 중 사조외, 그 계열사가 사조오양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동기관 한 곳이 회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먼저 법원에서 회생개시를 해 주고나면 사조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승인을 해 주면 번체공탁하여 상환한 후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조는 회생법을 약용하여 개시를 하도록 방해하면서 언제이자 수익까지 보고 있습니다.

7. 당시의 대표이사께서 되도록이면 양사가 상생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자주 회생장님께 3번이나 전화(2.2일)를 하셨으나 받지도, 연락도 안해주셔 2.7일 직원대표 명의로 회생

동의를 간곡히 요청하는 광고를 내자, 불쾌하니 그만두라며 법적대응하겠다는 협박문자를 저와 대표이사에게 사조기획실장님이 3회 보내왔고 2.14일 저에게 “명예훼손 위에 대한 금지 요청 및 민형사상 조치”를 하였으며,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조에 서 저를 고소하였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8. 사조는 처음 약속하고 이미 제출하셨던 대로 회생개시 및 인가동의서를 즉시 법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9.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십시오.

광고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억울함을 알릴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인티깝습니다. 디행히 광고를 보신 국민들께서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하시고 있어서 호소문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시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광고를 보신 국민들에게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서 우리네나라 기업사에 다시는 재벌기업에게 죽여서 헐값에 빼기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